



9면

뜨거운 관심속 농어촌 기본소득 순항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음 12월 16일) 제391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차 천변 2길 6번지

전북 의원 3명 “완주·전주 통합 추진”

전북, K푸드 수출 전진기지로

전북 행정지형 변화 논의 본 궤도 올라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새 도약준비 중요 시점 정부 5급 3특에 걸맞은 자체 전략 마련해야”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둘러싼 구체적인 변화가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운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전북 행정 지형 변화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전주병), 당 최고위원인 이성운 의원(전주)이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북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급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인 만큼 전북도 이에 걸맞은 자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정책 흐름 속에서 통합 광역권인 5급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고, 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내부 갈등이 이어질 경우, 전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사진 왼쪽부터)과 안호영 의원, 이성운 의원이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규모 국가 지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으로 국가 지원을 받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전북 스스로가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운 의원 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만들고, 완주

가 약화되는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상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완주군민과 전주사민, 양 지역 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거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통합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동영 장관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즉답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한 기자의 이번 완주와 전주 통합을 위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지사 도전에 대한 승부수는 질문에 대

해 정확한 맥락을 집었다며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의 성장 거점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협상력 있는 단위로 키워 전남·광주와 대등한 초광역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유치, 전북 KAIST 설립, 남원시 공공의료 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여러 핵심 인사들의 공개 선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지역 사회의 반응과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이원택 의원, 새만금신항만 등 트라이포트 바랑

새만금·군산지역 K푸드 수출입 거점 육성 전략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광활하고 원대한 새만금 지역을 모태로 삼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개발해 나후 탈피를 강조하고 있는 이를 활용한 대한민국 수출의 관문으로 도약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지역을 활용한 각종 대안을 제시한 근거를 중심으로 군산을 넘어선 전북을 동북아 물류 거점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새만금국제공항·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새만금·군산지역을 글로벌 이커머스 및 K-푸드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군산은 항만·공항·철도를 동시에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이자 대한민국 물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며 “새만금·군산을 환황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 통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 의원이 대중국·대일본·동남아 접근성이 뛰어난 서해안 입지를 활용해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을 내놨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다”며 “새만금 및 군산을 이마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과 대형 물류기업이 선택하는 서해안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규모 △자동차 물류센터 구축이 가능한 부지 조성 △세계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공공-민간 합작 방식의 물류 허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이자 K-푸드의 본거지이다. 그 가치가 물류와 수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며 “새만금·군산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공식품·수산식품을 아우르는 K-푸드 수출 전용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냉동·냉장 물류, 가공·포장, 통관·검역, 항공·해상 수출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 전북 농수산물품이 세계 시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권희성기자

고창군·도·행안부, ASF 확산방지 총력전

부군수 주재 방역관리 상황 점검... 방역수칙 신속 안내

고창군이 2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성승현 학천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발생 농장에 대해 즉시 출입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살처분·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

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근 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 강화,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소 운영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주민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과 방역수칙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반을 파

견하여 현장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 차량·축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군민들에게서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 2026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육아 공무원 배려 제도 신설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 △공직 내 전문성과 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

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할 경우,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평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했지만, 이를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조정해, 해당 평정 결과가 각각 1월과 7월 정기 인사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제 적용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만호기자



전주매일 캠페인